



검찰
PROSECU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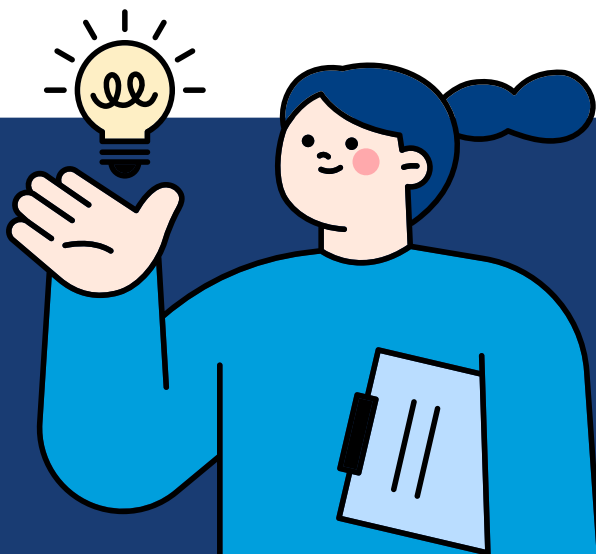
광주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바로알기

: 당신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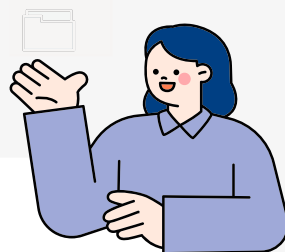
공정한 정의 실현으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광주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QR

휴대폰 카메라로 QR 스캔하시면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I	광주고등검찰청 소개	04
----------	-------------------	----

II	형사사법 업무	05
1. 항고		06
2. 항고 주요성과		07
3. 공판(항소)		08
4. 공판(항소) 주요성과		09

III	국가소송 업무	10
1. 국가배상		11
2. 국가소송		12
3. 국가소송 주요성과		13
4.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14
5.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주요성과		15

IV	수사지원·행정 업무	16
1. 시민 참여 위원회		17
2. 디지털포렌식 및 감찰·감사		18
3. 민원인(장애인) 편의 지원		19



광주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소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검찰,
광주고등검찰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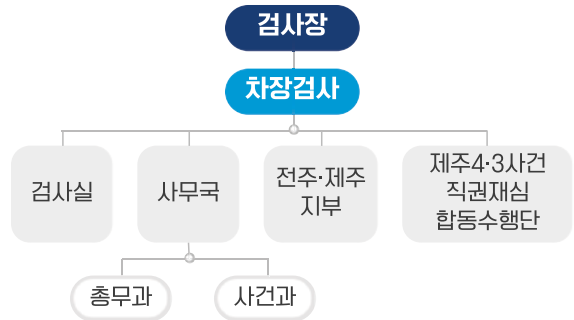
1 광주고등검찰청 소개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광주고등검찰청

연혁

- 1952. 4. 광주고등검찰청 개청
- 1995. 1. 고등검찰청 검사의 원거리 사무처리제도 도입에 따른 제주지부 개소
- 2006. 3. 전주지부 개소
- 2010. 4.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 2021. 11.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 2023. 8.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명칭 변경

광주고검 조직도



주요 업무 현황

형사사법 업무 1	국가소송 업무 2	수사지원·행정 업무 3
• 항고사건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중대 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수집, 증인 신문 등을 통한 공소유지 • 형사상고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소심 사건 처리에 공정성 확보	• 국가소송 수행 및 소송수행기관 지휘·감독 • 국가배상사건 처리 •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요사건 검토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지원을 통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지원 및 정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18개의 다양한 위원회 운영 (검찰시민위원회 등) • 광주고검 관내의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 후 증거 분석 • 관내 지검·지청을 대상으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수사사무·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 개선에 기여 • 인사관리, 예산 집행 등 행정지원

관할구역 안내

광주고등검찰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3개 지방검찰청과 7개 지청의 업무를 지휘·감독합니다.

행정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

-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 목포, 장흥, 순천, 해남지청
- 전주지방검찰청 산하 : 군산, 정읍, 남원지청
- 제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형사사법 업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검찰,
광주고등검찰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1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 및 국민권익 보호

업무 소개



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진정인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항고대상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사건)

- 기소유예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항고권자

- 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항고제기의 기간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업무 프로세스



항고장
제출

불기소처분 검찰청에
항고장 제출



항고기록
접수

불기소처분 검찰청에서
송부한 항고기록 접수



기록
검토

피의자·참고인 조사 및 추가증거
수집 등으로 혐의유무 검토



처분

재기수사명령
(직접경정) 등 처분

2025년 ~ 2026년 6월 항고사건 처리 현황

접수 **3,506**건

기각 **2,991**건

재기수사명령 등 **192**건

※ **재기수사명령이란?**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청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결정

※ **직접경정이란?**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불기소처분을 바로잡는 결정

2 항고 주요성과

항고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

1

토지 명의신탁 빙자 사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위해 매수한 토지가 고소인에게 명의 신탁한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여 고소인 명의 등기를 말소 유도한 사기 사건



광주고검은?

- ✓ 관련자 통화 녹취록 확보와 고령인 고소인의 어머니 조사 등 **보완수사** 실시
- ✓ 피고소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 및 공사비 부담 사실 추가 확인
- ✓ 피고소인의 진술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간에 모순됨을 확인



처분 결과

불구속공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제한법위반 사건



사건 개요

금전소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약정을 가장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은 사건



광주고검은?

- ✓ 피고소인과 고소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 및 확인서' 추가 확인
- ✓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문자메세지 확인 등 **보완수사** 실시
- ✓ 피고소인이 투자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처분 결과

구약식

벌금
1,000만 원 확정

3

모욕사건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소인이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건



광주고검은?

- ✓ 현장 CCTV 영상 정밀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한 범행 입증
- ✓ 증인 및 참고인 진술 비교·분석
- ✓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위증 사실 자백 확보



처분 결과

구약식

벌금
300만 원 확정

3 공판(항소)

1심 판결의 적정성을 다투는 항소심의 공소유지 업무를 통한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

업무 소개

항소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을 다시 구하는 제도

고검 항소사건

- 합의부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 사건
- 관할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사건 등

항소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피고인의 변호인 등도 항소 가능)

항소제기 기간

판결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심 검사 및 수사관의 역할(공소유지)

- ✓ 보완수사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추가 증거 수집, 양형자료 조사
- ✓ 1심 판결문 및 수사기록 검토 후 법정에서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증거 제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강하여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 업무 수행
- ✓ 최종 공판기일에 원심판결 유지, 형량 변경, 무죄판결 파기 후 유죄선고 등 사건에 대한 최종의견을 제시하며, 이후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

형사상고심의위원회

2심 판결의 상고권 행사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

특징

- 형사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심의
- 법률·학계 전문가로 구성
- 상고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위원 구성 총 16명 (위원장 포함)



변호사

5명



교수 등 학계

7명



법무사

4명

업무 프로세스

1 항소사건 접수

-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 또는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

2 항소심 재판 준비

- 1심 판결문 검토 및 수사기록 검토
- 사실관계 확인
- 보완수사 및 양형자료 조사

3 항소심 공소유지

- 항소이유 설명
- 추가 증거서류 제출
- 피고인 및 증인 신문
- 피고인 주장반박 및 공소사실 입증

4 최종 의견 제시 및 상고 여부 결정

- 항소심 최종의견 제시
- 판결 검토
- 상고 여부 결정

4

공판(항소) 주요성과

증인신문, 감정신청,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사법 실현

1

전문가 감정신청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 활동으로 무죄를 뒤집은 사례

1심(원심)

암호화폐를 배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5억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항소심(광주고검의 대응 및 활동)

- ✓ 피해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입증
- ✓ 전문가 감정신청
 - 포스텍 블록체인센터 교수를 상대로 감정신청
 - 해당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 회보하여 법정 제출



처분 결과

징역 4년 확정

피해자 증인신문, 전문가 감정신청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 활동을 통해 중형 선고

2

CCTV 분석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정성 없는 반성을 밝혀내고 형량을 높인 사례

1심(원심)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징역형 선고

항소심(광주고검의 대응 및 활동)

- ✓ CCTV 영상 재분석
 -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인 순간을 노려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 입증
- ✓ 폭행 직후 구조 활동 없이 현장에 방치한 사실 확인
- ✓ 유족 면담 및 조사
 - 가해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음을 입증



처분 결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확정

범죄의 중대성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 중형 선고

3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시킨 사례

1심(원심)

초범, 자백, 형사공탁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광주고검의 대응 및 활동)

- ✓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입증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한 점 강조
- ✓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제출



처분 결과

징역 2년 6월 확정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



광주고등검찰청



국가소송 업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검찰,
광주고등검찰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배상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업무 소개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의 고의·과실 또는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 운영

국가배상심의회는 위원장, 담당검사 및 판사·변호사·의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국가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실시하여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	운영 실적
• 위원장 • 담당검사 • 판사·변호사·의사 등 외부위원들	2025년도 142건 2026년도 208건

주요 국가배상심의 사례

① 상수도공사로 인한 손해

사건 개요

상수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카페 내부 시설물이 손상되고, 통신선 절단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사건



심의 결과

- ✓ 사실조회 실시
- ✓ 현장 자료 검토
- ✓ 관련 법령 검토

공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신청인 손해 일부를 배상 결정

②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

사건 개요

차량이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은 사건



심의 결과

- ✓ 사실조회 실시
- ✓ 현장 자료 검토
- ✓ 관련 법령 검토

도로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 인정
신청인 손해 일부 배상 결정

업무 프로세스



2 국가소송

국가가 주체가 되거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국가기관의 소송수행정 지휘 감독

업무 소개

국가소송이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국가의 재산권 보호와 적절한 법 집행을 위한 업무입니다.
- 검찰청은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수행청을 지휘 및 감독하며, 판결 이행과 후속조치를 통해 국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 중요 국가소송 사건의 상소 여부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심의
- 소송의 효율적·합리적 해결 도모

위원 구성 총 15명(위원장 포함)



변호사

6명



교수 등 학계

7명



법률구조공단

2명

주요 활동

- 2026. 4. 30. 제1회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개최
- 소가 11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사건심의
-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상소 여부 결정

주요 국가소송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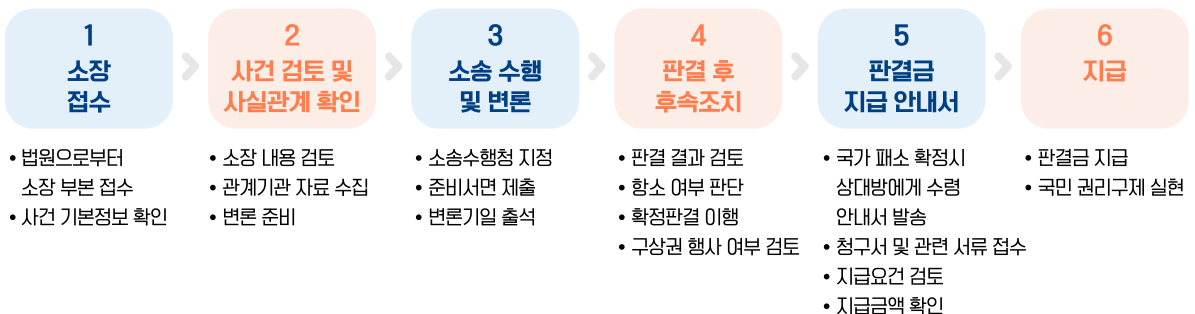
소송수행청의 지휘 및 감독

- 경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약 30개 국가기관의 국가소송 수행을 지휘, 감독
-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소여부, 확정판결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등 소송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 감독
- 2025년 기준 918건 지휘

판결금 지급

- 국가소송 판결 확정 즉시 판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신속히 검토
- 예산 배정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배정일로부터 3일 이내 판결금을 지급하고, 지급 완료 사실을 피해자 및 유족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등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 지원
- 2025년 총 451건, 7,098명에게 약 1,070억 원의 판결금 지급
- 판결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미지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연 5~12% 수준의 지연이자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

업무 프로세스



3 국가소송 주요성과

국가소송을 통해 국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국가소송 업무를 통한 검찰의 역할



국가 권익 보호

- 국가 재산권 보호
- 공정한 법질서 확립
- 소송수행기관 지휘



국민 권리 구제

- 판결금 신속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 국가에 의한 피해 구제
- 과거사 치유 및 화해 지원

업무 우수 사례

국가 권익 보호 [주요 국가소송 유형]

1 손해행위 취소소송 (재산 빼돌리기 방지)

국가에 대한 채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대한민국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 (숨겨진 권리 찾기)

국가에 대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이 대신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잘못 지급된 세금 환급금 반환)

착오 지급, 허위 신고, 중복 환급 등으로 인해 세금 환급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대한민국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권리 구제 [과거사 사례]

1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사건 개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입니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판결금 지급 현황

구분	지급액(원)	건수	인원
2025년도	98,309,032,160원	425건	6,423명
2026년도(1~6월)	22,075,246,810원	150건	1,247명

2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사건 개요

정부 수립 초기 단계,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여순사건 관련 판결금 지급 현황

구분	지급액(원)	건수	인원
2025년도	8,431,913,740원	24건	222명
2026년도(1~6월)	23,784,968,260원	44건	1,093명

3 형제복지원 사건

사건 개요

1960년부터 1992년까지 형제복지원에서 강제수용, 강제노역,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관련 판결금 지급 현황

구분	지급액(원)	건수	인원
2025년도	272,298,620원	2건	2명
2026년도(1~6월)	284,643,540원	3건	3명

4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제주4·3사건 당시의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
정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직권재심 업무 수행



업무 소개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 규모

- 제주도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
- 2만 5천 명 ~ 3만 명 희생 추정
- 300여 개 마을 소실
- 2만여 호의 가옥 소실

제주 4·3사건 합동수행단 업무

-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지원
- 진실 규명을 통한 과거사 정리와 국민통합 기여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권재심 수행으로 정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

합동수행단 구성

광주고등검찰청 소속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제주4·3사건처리과), 제주도청(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직권재심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수행단 연혁

- 2021. 6.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수형 사실이 있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제도 신설
- 2021. 11. 제주4·3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에게 제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
- 2021. 11.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 2022. 8. [법무부·대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약 1,8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 2023. 2.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명칭 변경
- 2023. 8. 제주4·3특별법 개정·시행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하는 권고 규정 마련

관련 법적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
재심 청구 가능

제15조(직권재심 청구 권고)

4·3위원회가 유죄판결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가능

5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주요성과

현재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3,321명의 수형인 중 2,871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완료되었으며, 남은 약 460여 명의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업무 수행

주요 성과

군법회의 수형인

전체	청구 누계	선고누계
2,379명	2,233명	2,207명
		

일반재판 수형인

전체	청구 누계	선고누계
942명	638명	635명
		

- ☑ 현재, 직권재심 및 유족 등이 직접 제기한 청구재심 청구분을 합하여 군법회의의 수형인 2,379명 중 2,233명(진행률 93.9%), 일반재판 수형인 942명 중 638명(진행률 67.7%)에 대한 재심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 ☑ 향후 최대한 신속히 희생자로 결정된 약 460여 명의 남은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공판 수행도 충실히 진행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사례

1 2대에 걸친 명예회복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제주 4·3사건 군법회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 중 사망하였습니다. 합동수행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하여 두 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오랜 세월 이어진 가족의 아픔과 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세대 간의 상처를 치유하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2 생존수형인 무죄 선고

16세에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생존수형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직권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장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존 중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존수형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대상자 발굴·기초조사

수형인 명부, 판결문과 4·3희생자 결정 자료 등을 비교·분석하여 직권재심 청구대상자를 특정하고 기초 인적사항 확인

자료수집·유족확인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수형 관련 기록, 4·3관련 자료 등을 추적하고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을 찾아내어 당시 정황 내지 관련 진술 확보

직권재심 청구

수집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직권재심 (군법회의, 일반재판)을 청구

재심개시 결정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따른 공판 기일이 지정되면, 수행단 소속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관계에 따라 무죄 구형

무죄 선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선고



광주고등검찰청



수사지원·행정 업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검찰,
광주고등검찰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1 시민 참여 위원회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등 18개의 다양한 위원회 운영

검찰시민위원회

업무소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주요 업무와 제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다양한 지역·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며, 수사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구성

총 24명 (위원장 포함)

개최 실적

2025년 : 8회 / 16건
2026년 (6월 기준) : 5회 / 10건

주요 심의 사례

자전거 절도 사건



사안 요지

피고인은 00동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트럭에 싣고 가져감

심의 내용

기소유에 처분에 대한 적정성 심의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구공판 의견 7명,
구약식 의견 3명

직접경정 사유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나, 자전거 파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심의 결과 형사처벌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제시

처분 결과

원 처분 기소유에 → 기소유에 취소 후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확정

영장심의위원회

업무소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

총 23명(위원장 포함)

업무절차

- 1 검찰 영장 신청 ▶
- 2 검사 청구 거부(기각 또는 반려) ▶
- 3 검찰 심의 신청 ▶
- 4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
- 5 청구 적정 여부 의결

주요 심의 사례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영장심의



사건 개요

가상주식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거래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진행 경과

- 경찰 : 피의자 등 주범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 수사검사 : 구속영장 신청 2회 기각
- 경찰 :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신청
- 광주고검 : 영장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청구 적정' 의결
- 구속영장 청구

2 디지털포렌식 및 감찰·감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 및 공판을 지원하고,
감찰·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 구현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팀은 광주고검에 설치되어, **광주·광남**
광주고검 관할구역 내에서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고
증거분석하여 수사와 공판을 지원합니다.

업무소개

-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과학적 방법으로 수집, 분석하는 수사기법 중 하나입니다.
- 수사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을 지원합니다.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팀 설치 배경 및 역할

- ✓ 2010. 4. 신설된 이후, 권역별 거점청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수사 지원 실시
- ✓ 권역별 수사지원 거점 구축
 - 대검 중심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체계를 권역별 거점청으로 확대
 - 관할 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
- ✓ 업무 효율성 증대
 - 디지털 증거 확보
 - 분석 시간 단축
 - 과학수사 기반을 강화하여 수사 대응 역량 향상



감찰

광주고등검찰청은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광남**
관내 지검 및 지청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지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개

감찰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를 예방·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



비위 예방 및
점검



비위 조사 및
확인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

감사

광주고등검찰청은 수사사무·행정사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 검찰업무 개선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개

감사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검찰 기본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



청 운영
상황 점검



인권보호 및
수사절차
적법성 점검



검사 수사사무
점검



일반 행정사무
점검

3

민원인(장애인) 편의 지원

친절한 민원 안내 및 장애인 편의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각 부서별 연락 안내

검사실	전화 062-231-3203 ~ 3208
총무과	전화 062-231-3244 팩스 062-231-3404
사건과	전화 (민원) 062-231-3254 (사건) 062-231-3253 (집행) 062-231-3256 팩스 (민원사건집행) 062-231-3405 전화 (국가배상) 062-231-3264 (국가소송) 062-231-3262 (제3채무) 062-231-3263 팩스 (송무업무) 062-231-3406

장애인 지원제도



수어통역인 운영

2022년부터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시행하여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적 조사환경 구축

장애인 전용 조사실을 운영하고 휠체어 비치,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조사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보호·지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 등 맞춤형 보호·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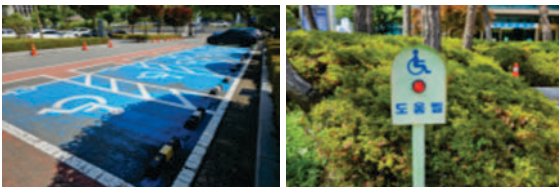
성폭력, 학대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문 전 지원요청 및 상담 안내

수어통역, 이동지원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제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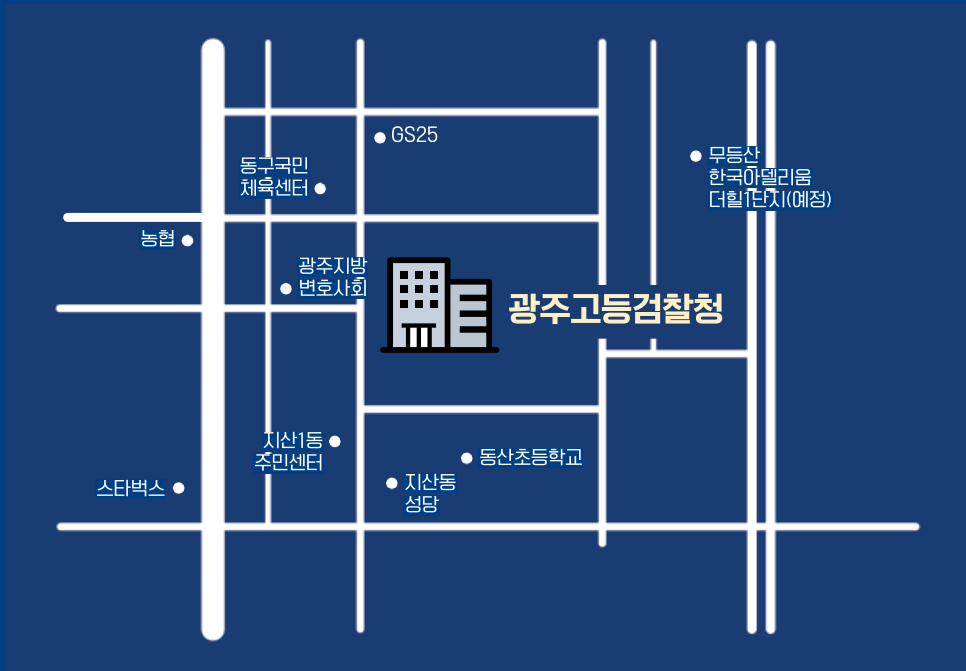
장애인 편의시설

- 외부 시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점자블록
 - 민원실 경사로
 - 장애인 도움벨



- 내부 시설**
- 장애인용 승강기
 - 음성안내 기능
 - 점자 안내판
 - 장애인 화장실
 - 단차 최소화 설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지하철 1호선 이용하여 남광주역 하차, 2번 출구에서 17번 버스 이용

버 스 법원 → 진월 17, 지원35, 두암81
법원 입구 → 진월17, 봉선27, 일곡28, 문흥80, 두암82, 지1187번

문의

온라인 <https://www.spo.go.kr/site/highgwangju/main.do>

방문접수 1층 민원실

대표번호 1301

